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반 헌법적인 '지역 발전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쟁점과 대안 토론회'

"반 헌법적 발상 … 개정안 철회해야"

'지역균형' 표현 없어 불균형 더욱 심화

수도권 규제 완화 땐 지방 피폐 가속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 '지역발전특별법'이 반헌법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등이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이같이 지적하고 개정법률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지역균형'이라는 표현이 거의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또 정부의 개정안과 관련,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이 삭제돼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광역경제권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며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지원단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정안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개칭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명기함은 물론 ▲법안에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와 '지역상생협력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법률의 하위법률로 명기할 것 등을 제안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광역경제권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정부가 굳이 '지방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려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능배분과 산업적 특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율 부산분권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역발전특별법은 그 기본 인식에서부터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설정했다는 근본 오류가 있다"고 전제한 뒤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역시 결국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시도 간 나눠먹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지역발전특별법은 명칭에서부터 내용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은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마련한 지역발전특별법에는 '균형'이라는 큰 내용이 빠져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후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갈 경우 수도권 과밀화는 심해지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피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윤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법 개정의 핵심은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시점에서 법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정부의 정책을 두둔했다.

그는 또 "균형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더라도 법 목적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명기했다"며 "지역정책의 주목적은 지역 간 격차 축소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연도별 교부세 현황 분석

서울 18%·부산 11% 집중화 심각

광주·전남 지원 비율 전국 최하위

종합부동산세 세수로 지방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교부세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등 경제형편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상당 부분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적 낙후지역인 광주와 광주의 지원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부동산 교부세 교부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 지급된 부동산 교부세는 2005년 3천929억원이었으나 2006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8천892억원, 2008년(1차분) 1조1천91억원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2005년 전체 교부액의 20.1%인 791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06년 24.9%(2천544억원), 2007년 18.5%(3천493억원) 등 매년 20% 내외를 받았다. 2008년엔 9.6%(1천68억원)로 비중이 크게 줄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전국 최고인 평균 18.3%의 부동산 교부세가 교부됐다.

경기도는 2005년 8.9%(348억원), 2006년 18.9%(1천922억원), 2007년 4.6%(873억원), 2008년 8.7%(969억원) 등 매년 평균 10.3%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았다.

또 부산은 2005년 15.6%(611억원), 2006년 9.3%(951억원), 2007년 12.9%(2천428억원), 2008년 7.1%(791억원) 등 평균 11.2%, 대구는 2005년 7.2%(281억원), 2006년 6.8%(694억원), 2007년 11.1%(2천102억원), 2008년 4.1%(457억원) 등 평균 7.3%의 부동산 교부세가 각각 교부됐다.

반면, 광주는 2005년 4.8%(187억원), 2006년 3.6%(364억원), 2007년 3.6%(687억원), 2008년 2.5%(279억원)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인 평균 3.6%의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받았다. 대표적 낙후지역인 전남도도 2005년 3.9%(156억원), 2006년 2.9%(293억원), 2007년 5.4%(1천21억원), 2008년 10.9%(1천208억원) 등 평균 5.8%의 교부세를 받는 등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의 대도시보다 훨씬 적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연도별로 수도권이 전체 부동산 교부세의 23.0%에서 49.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봤다"며 "교부세가 대도시와 경제형편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도·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남 경쟁력 전국 꼴찌 … 대책 시급

김석원 의원 지적

전남은 군소 도시와 취약한 농촌지역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석원(민주당·해남) 의원은 19일 전남도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한국지방자치경쟁력(KLCI) 조사 결과, 올해 전남도의 경쟁력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4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495점, 대구가 494점 순이었다. 전남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군소도시나 취약한 농촌지역이 많아 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 현상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 대표 벼 품종 병충해 취약

강우석·강성종 의원 밝혀

전남지역 대표품종으로 농가에 보급된 일부 벼에서 병충해가 생겨 영암과 신안 등 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우석·강성종 의원은 19일 도청 농림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진1호, 남평벼, 일미벼 등 이 지역 벼 품종에서 병충해가 발생해 농가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도내 벼 재배면적 18만9천ha 중에서 이 지역 대표품종으로 보급된 동진 1호와 남평벼, 일미벼에서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해 이들 품종이 병충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진 1호의 경우 전체 파종면적 6만8천ha 중 4천721ha에서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시 고용 보조금 한번도 지원 안해

유재신 의원 지적

광주시가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해당 기업들에게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유재신(민주·광산 2)의원은 19일 광주시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고용보조금으로 4억7천520만원을 받아놓고도 여지껏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용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광주시는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 일자리 사업' 자체 감사 제대로 해야

광주시의회 교사위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광주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설치·운영사업'위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 광주시의 자체 감사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자체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는 19일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광주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위탁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 광주시의 자체 감사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이 부족해 의혹을 해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광주시가 직접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졸속 심사를 통해 공모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